

주권국가체제 시대와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

김승배**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동북공정에서 일본으로 |
| II. 베스트팔렌에서 주권국가체제로 | V. 결론 |
| III. 주권국가체제에서 동북공정으로 | |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동북공정을 포섭하는 영토적 문제의 연장선에서 중국의 주권인식을 고찰한다. 우선 중국 국제정치학 계열의 논리에 주목함으로써 동북공정과 아울러 동시대에 부상된 중국적 학문세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일본과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동북공정에 관해 일본은 제3자이며, 자국 문제가 아닌 이상 다른 주권국가들의 역사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 학계에서는 동북공정 관련 글들이 발표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논리 구조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공정은 결국 현재 주권국가체제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주권 개념 발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중국적 주권의 이론화는 중국의 역사 재정립과 연계된다. 그 특징은 역사투영에 있다. 동북공정과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문제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중국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투영하고 있다는 논리가 일본에 있다. 둘째, 일본 학계에서는 동북공정을 통해 20세기 초 일본이 만주에 관여했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1945년 이전에 일본에 존재했던 만주사와 조선사를 일체화시킨 문명사적 만선사(滿鮮史)는 오늘날 쇠퇴했으나, 만주-한반도 지역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일본에서 제기되었다.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임(NAHF-2016 한중-기획-2-3).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주제어: 베스트팔렌, 주권국가체제, 동북공정, 역사투영, 중일관계

I. 서론

과거 중국 중심적이었던 화이질서(華夷秩序)가 제국적 질서였다는 견해 여부는 제국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화이질서란 “중국의 역대왕조가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구한 제국적 지향”을 의미한다(백영서 2005, 13-14). 한편 화이질서는 기능적으로 간접통치, 조공통치, 대등한 관계성조차도 있었고, 다양한 통치원리가 공조한 질서였기 때문에 단순히 제국적이었다는 견해를 부정하는 시각도 있다(Hamashita 1997, 118-125). 과거 중국의 정치 이념이나 지향성, 성격성에 관한 연구들을 보았을 때, 쟁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근대사에서 다른 제국들의 간섭을 받고 반식민지와 내전을 겪었던 현재 주권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측에서 “국가의 주권, 안보, 평화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여 중국 발전의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두 개의 백년’이라는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논리가 분출된다(먼홍화 2017, 15).¹⁾ 강대국이며, 책임국가로서 부상한 중국은 자국의 국가정책과 행동을 외부에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역사 연구이며 국가 프로젝트인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은 연구 성과를 서서히 공표해 갔고, 2007년에 종료했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의 지방정권으로서 결론을 내렸던 이 동북공정은 한국의 반발을 일으켰다.²⁾ 이는 2004년 한국과 중국 정부의 구도합의에 따라 최대 외교과제로서 분출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잠재적으로는 존재한다. 사실 중국에서는 한국 고대사를 중국 연호 중심으로 풀어낸 연구

1) 두 개의 백년이란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창설 100년인 2049년을 가리킨다.

2) 동북공정에 관한 한국 연구서들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연구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구려연구회(2008),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6), 전병곤(2004).

서들이 출간되어 있는 상황이다(『연합뉴스』 2017/01/19). 동북공정은 중국 중앙정부 최고 학술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한반도 접경 지역인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라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등 동북 3성이 추진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군사력과 같은 물리력뿐만 아니라 역사 인식적, 관념적 문제가 있으며, 현상질서(現狀秩序)를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다. 동북공정은 고대사라는 학문영역을 넘어, 중국이라는 현재의 국가 영토와 주권에 관련된 정치문제로서 관찰된다(윤휘탁 2008a, 290).

이 연구는 동북공정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초점영역을 넓힘으로써 진행한다. 첫째, 동북공정을 포섭하는 영토주권과 관련하여 중국의 주권 인식을 고찰한다. 특히 동북공정은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주도했으나, 이 글에서는 중국의 국제정치학 계열의 주요 인사들의 논리에 주목함으로써 동북공정과 동시대에 부상된 중국적 학문세계를 살펴본다. 둘째, 일본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킨다. 동북공정에 있어 일본은 제3자이며 자국 문제가 아닌 이상, 다른 주권국가들의 역사 문제에 개입하지는 않는 듯하다. 고대 역사에 대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궁극적으로 한중관계, 즉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중국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동북공정에 대해 일본은 정부 수준에서 직접적인 관여, 주장,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계에서는 동북공정 관련 글들이 발표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 주권국가체제 속에서 동북공정과 관련되는 중국의 주권인식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성까지, 초점영역의 확대를 개별 이슈를 단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동북공정의 시공간을 동북아 시공간으로 포착한다.

II. 베스트팔렌에서 주권국가체제로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은 뮌스터조약과 오스나브뤼크조약의 총칭이며, 30년 전쟁을 마감했다. 이 평화조약은 근대 국제법 발전의 단서이며, 원조(元祖)적 의미를 지닌다. “가장 신성(神聖)하며, 불가분하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이름(In the name of the most holy and individual Trinity)”이라는 내용이 전문에 있듯이, 베스트팔렌조약에는 신의 영광 및 기독교 세계의 복

리에 관해 참여국이 동의한다고 규정했다. 신성로마제국과 프랑스 및 스웨덴 간에 평화와 우정관계가 선언되었고, 상호내정불가침의 원칙을 확립했다. 30년 전쟁이 종교를 둘러싼 전쟁에서 영토를 둘러싼 전쟁이 된 것처럼 베스트팔렌조약은 결국 영토 문제에도 영향을 주었다.³⁾ 근대 주권국가체제에는 영토를 둘러싼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 평화조약은 평화를 형성하기 위해 기독교 문명권에서 기독교적 이념을 공통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은 사절의 교섭을 통해 다국 간 조약으로 형성되었고, 조약 위반행위에 개입이나 조약보증국의 존재로 조약체제가 유지됨을 명시했다. 이는 이후의 유럽사회나 유럽국제법에 영향을 끼쳤다. 베스트팔렌조약은 후세의 평화조약 혹은 그 외의 조약에서 주요 행위자인 주권국가의 의미 부여에 기여했고, 주권국가들로 형성되는 주권국가체제 출범의 시공간이 되었다.

한편 베스트팔렌조약에 따라 주권국가체제가 탄생했다는 시각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치경제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권국가에 의한 근대적 국제관계는 1688년 잉글랜드에서 등장한 자본주의 부흥으로 서서히 나타났고, 잉글랜드와 유럽 대륙의 다른 국가 사이에서 벌어진 지정학적인 경합관계가 긴 시간을 통해 주권국가체제로 확립되었다는 논리이다(Teschke 2003). 또한 주권국가체제는 1648년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기나긴 시간과 유럽이라는 공간에 속해 있는 다양한 단위들의 상호작용과 복합적 요소들의 축적으로 19세기 초에 나타났다는 것이다(전재성 2009, 22-26).⁴⁾ 물론 주권국가들을 단위로 하는 근대적 국제관계, 즉 절대적, 배타적 주권국가체제가 순식간에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베스트팔렌체제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맹목적 주장은 오류가 생길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17세기에 절대적인 주권국가체제가 바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체제가 마련되는 공간의 틀이 창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베

3) 베스트팔렌조약을 비롯한 1648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난 전쟁 중에서 80%의 평화조약은 전후처리로서의 영토변경이 시행되었다(Holsti 2004, 92).

4) 아카시(明石)에 의하면 18세기 중반 이후에 공간된 일부 국제법사에서 베스트팔렌조약이 근대적 조약관계의 시점(始點)이었다는 저서들이 나왔는데, 1841년에 공간된 휘튼(Henry Wheaton)의 *Histoire des progrès du droit des gens en Europe, depuis la paix de Westphalie jusqu'au Congrès de Vienne: avec un précis historique du droit des gens Européen avant la paix de Westphalie*가 큰 역할을 했다(明石 2009, 497-510).

스트팔렌조약 전후(前後) 시기에 한 국가의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이 안정화되었다(김준석 2012). 베스트팔렌조약은 현대적 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새로운 국제법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종교적 조건들을 규정했다(Lesaffer 2004, 10). 필포트(Daniel Philpott)에 따르면 베스트팔렌조약이란 첫째, 베스트팔렌의 중심사상(leitmotiv)은 황제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즉 자율성의 원칙이었다. 둘째, 베스트팔렌체제의 구성원들에게는 기독교의 문화가 요구되었다. 셋째, 내정불가침의 원칙을 내세웠다. 철학자나 법학자들은 18세기부터 이 내정불가침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내정불가침의 원칙은 유럽의 표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Philpott 1999, 158-160). 제국기구의 쇠퇴, 정교분리의 확립과 종교전쟁의 소멸을 야기했던 베스트팔렌을 유물론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Philpott 2000). 베스트팔렌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에게는 분명히 서열이 있었지만,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적인 다국 간 국제회의였으며, 무엇보다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평화를 성사시키려고 합의했다(久保田 2012, 175). 베스트팔렌조약은 주권국가체제의 과도기(過渡期)이며, 분수령을 이룬다. 유럽이라는 공간에서 같은 시간축을 공유한 나라들이 서로를 상이한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국제적 회의체를 통해 공통인식이 형성되었다는 측면에서 베스트팔렌조약으로 탄생한 베스트팔렌체제가 가지는 의미는 희박하지 않다.

미국과 영국 간의 미국독립전쟁(American War of Independence, 1775-1783년) 와중에 선언되었던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영국이라는 타자에서의 분리와 독립은 미국독립전쟁을 마감했던 1783년 파리조약(Treaty of Paris)에 명시되었다.⁵⁾ 이 조약 전문에도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의 삼위일체로 시작한다. 서구의 국제법은 비서구로 과급되었다.

서구적 주권국가체제는 이후, 다양한 국제법에 반영되어, 결국 19세기 동북아 나라들도 이 체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다만, 주권국가체제는 국가 간 관계의 평등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 있어 주권국가체제의 과급은

5) 2018년 한국어로 번역된 그린(Michael J. Green)의 책 제목은 『신의 은총을 넘어서: 1783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대전략』이다. 그가 '1783년'을 내세운 것처럼 공화국 미국의 탄생은 1783년 파리조약에 있다는 것이다(그린 2018, 8).

불평등조약으로 표출되었다. 영국은 1842년 중국과 난징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서구의 조우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⁶⁾ 1854년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태평양 항로의 기항지로서 일본과 미일화친조약을 체결했다. 1858년 일본은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했고, 관세자주권이 없는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⁷⁾ 이를 수용한 일본은 미국과의 조약 내용을 참고하여 조일수호조규(1876년)로 조선과 접근했다.⁸⁾ 물론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으로 알 수 있듯이 근대 국제법에 조선을 편입시킨 것은 미국이었다.⁹⁾ 그리고 주권국가체제 시대에 대한제국은 탄생했다.

중국 국제법학자 류즈윈(劉志雲)은 근대 중국에 있어 난징(南京)조약, 아이훈(璦琿)조약, 텐진(天津)조약, 베이징(北京)조약, 시모노세키(下關)조약, 신축(辛丑)조약 등의 불평등한 조약들을 “기억이 매우 비참”한 것이었다고 표현한다. 그는 “국가와 국제법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국력과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며, 비록 조약이 “서방의 국가 간 평등 관계를 유지하는 근원이 되었”으나 “중국에서의 서방 열강의 관계는 오히려 약탈 방식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미중관계를 의식하면서 그는 “미국의 길”에서 “중국의 길(中國道路)”이 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최소한 중국의 국력과 이데올로기가 변화되고 국제법 관계도 변화될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류즈윈 2017, 236-237).

-
- 6) 다만, 난징조약 이전인 1689년 청제국과 러시아가 체결했던 ‘네르친스크조약’이 청제국에 있어 근대적 국제조약이었다. 자세한 연구는 김명섭(2017)의 연구 참조.
- 7)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의 국가목표 중 하나는 불평등조약의 개정이었다. 결국 1911년 미국과의 통상항해조약으로 불평등조약은 소멸했다.
- 8) 1875년 12월 주일 미국공사 빙엄(John Bingham)은 일본 외무경(外務卿)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게 일본을 개항시켰던 페리(Matthew C. Perry)의 *Narrative of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dr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일본원정기』을 건네주었고, 미국이 일본에 했던 것처럼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에 행하는 절차를 알렸다(나가타 2017, 40-41).
- 9)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미국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조선에게 불평등한 것이었지만, 청국이나 일본의 불평등조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온화했다. 다만 이후의 1883년 영국 및 독일, 1884년 러시아 및 이탈리아, 1886년 프랑스와의 조약들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Ⅲ. 주권국가체제에서 동북공정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반박에는 중국의 과도한 역사 해석과 현실적으로 부상한 대국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것이다. 중국은 국내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체성을 중화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서 승화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통합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김태완 2008, 21-28). 여전히 중국 학계에서는 동북공정식 인식을 견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김현숙 2016). 한편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공정은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한국 역사학자들의 동북공정 관련 연구는 고대사연구에서 출발했으나, 중국현대사로 이어졌고, 이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나 신중화주의 문명사관이라는 영역까지 확산연구가 진행되었다(백영서 2013, 65-66). 동북공정을 추진한 마다정(馬大長)은 동북공정이 “국가의 통일, 민족의 단결, 변강의 안정”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연구자 윤희탁은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 프로젝트나 역사지리 연구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연구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적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윤희탁 2008b).

그렇다면, 동북공정에 대한 관찰초점의 영역을 넓혀, 국가주권을 중시하는 중국의 국제정치학 계열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무익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당시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학부 주임 장원링(張蘊嶺)은 동북공정의 여파를 예상하지 못했고,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은 “과거 국경 지대의 역사와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은 국경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국경은 일종의 ‘통치(governance)’ 개념”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동북공정 사태는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관건은 처리 방법에 있”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국경 문제가 없고, 영토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문정인 2010, 234).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특별연구원 및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 치바오량(戚保良)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동북공정을 추진한 것이 아니지만, “동북공정은 고구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중국 국경 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시간적으로는 고대·근대·현대 역사 연구의 일부분”이

라고 했다. 오히려 그는 판원란(范文瀾)과 귀모뤄(郭沫若)가 주장하는 ‘일사양용(一史兩用)’, 즉 현재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압록강 이북의 고구려 역사는 중국사에 속하고,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역사는 한국사에 속한다는 생각을 지지했고, “역사유물주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문정인 2010, 326).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및 중국 국제공공관계협회 이사 진찬룽(金燦榮)은 동북공정의 배후에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있다는 설을 부인했고, 동북공정은 “학술 관료화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 책임자 마다정과 관련 연구자들이 이슈를 쟁점화하여 중국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얻어내려 했다고 말했다(문정인 2010, 443-444).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및 2008년 제11차 전국정치협상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자칭궈(賈慶國)는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고토(故土) 회복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 간의 기존 국경 질서에 대해 양보할 뜻이 전혀 없다. 분단 한국이나 통일 한국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한중관계가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현재 표방하고 있는 가치 동맹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즉,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면 됐지, 왜 거기에 가치 동맹까지 가미하는 것인가? 가치 동맹의 표적은 중국과 북한”에 있을 것이며, “중국은 이에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다(문정인 2010, 477). 과거 역사에 관한 인식 충돌이 결국 동맹이라는 현실정치 영역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칭궈는 미중관계, 중국외교 그리고 국제정치의 전문가인데,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에 동맹을 제시한 것처럼, 한중관계에 있어 동북공정은 동맹영역의 문제까지 연계된다.

동북공정에 초점을 맞출 때, 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의도를 신중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의 국제정치학 계열에서는 중국에 맞는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고대 역사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투영(historical projection)’의 경향이 있다. 중국적 국제정치학 이론의 특징은 적어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 스스로가 세계 속의 강대국 중국의 위치와 역할을 자인하며, 이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인 자오팅양(趙汀陽)의 이론 핵심은 ‘천하(天下)’에 있다. 그는 “세계에서 중국이 공헌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는 새로운 형태의 대국, 세계를 책임지는 대국, 세계사에 출현한 갖가지 제국과 아주 다른 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했고, “세계를 사유의 단위로 삼아 문제를 분석하여 서양의 민족/국가의 사유 방식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중국은 “세계를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새로운 세계 이념과 세계제도를 창조”하는 것을 주장했다(자오팅양 2010, 12).¹⁰⁾ 중국 고전을 서구 현실주의 및 이상주의에 대입하여 재해석을 시도하는 옌쉐통(閔學通)은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전망하고 ‘역사적 관성(Inertia of History)’을 강조한다. 그는 민족 부흥을 위해 중국이 현행 국제체제를 재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사상 제시, 국제사회의 행위규범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규범에 따르게 하는 단계적 방향성을 강조했다(옌쉐통 2014, 265-255). 중국의 전통 사상에서 새로운 국제관계 이론을 도출하는 친야칭(秦亞青)은 전통 중국 철학 중 하나인 중용(中庸)에서 국제관계의 답을 구하고 있다(문정인 2010, 386). 그는 중국의 독자적인 사상으로서 유교 문화적 천하관, 조공체제, 근대 중국의 주권사상, 혁명실천, 개혁개방사상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융합의 실천 등을 들었다(徐濤 2012, 61-62). 즉 중국학과를 만들고자 하는 그는 중국 및 아시아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서양 이론은 한계가 있고, 서양 이론에 대한 비판적 학습을 통해 중국적 국제정치학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했다(이중성 외 2014, 98).

둘째, 기존 서구 모델의 규칙성, 사회과학성, 베스트팔렌체제의 한계점을 강조한다. 현재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구적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국의 국제정치학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적 사명이라는 것이다. 자오팅양에 따르면, “국제 이론과 민족/국가 이데올로기는 모두 베스트팔렌 조약의 정신에서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그것의 관점 속에 존재하지 않는 민족/국가보다 높거나 큰 어떤 정치 단위와 정치 이익을 결정했고, 정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국가의 성격이 세계를 비정치적인 존재로 만들거나 자유롭게 쟁탈하는 생존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자오팅양 2010, 92).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소장 왕이저우(王逸舟)는 2010년에 동북공정이

10) 원저는 중국에서 2005년에 출판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책략이 아닌 중국 정부의 실수라고 한 바 있다(문정인 2010, 112-113). 한편 그는 2011년에 『創造性介入: 中國外交新取向(창조적 개입: 중국 외교의 창조적 개입)』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베스트팔렌조약으로 탄생한 주권 개념’을 설명한 뒤, 새로운 주권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한 국가에서 ‘주권’은 일단 획득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주권은 주권 행사자(국가정부)의 행위규범과 자아표현에 따라 끊임없이 확장되고 축소되며,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반복한다. 진보적인 국가는 매우 견실하고 믿음직한 주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후진적인 국가는 자주적인 주권행사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새로운 주권관은 새로운 시대의 세계적 흐름을 대변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들의 발전이 더 높은 단계에 이르러가자 하는 보편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창조적인 개입도 태도와 행동에 있어 마땅히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주시해야 한다.”(왕이저우 2013, 123-124)

물론 여전히 이들의 이론은 학문영역에서 확립된 상태가 아니지만, 중국 학파의 등장은 세계화 시대 강대국으로서 등장한 중국 자신의 정체성 구축과 더불어 세계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조명한다. 고대 중국의 천하관은 현대에서도 중국의 외교활동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역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홍정표·장즈롱 2011, 154).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20년 동안에 이른 내부적 논쟁을 통해 2004년경에는 중국학파의 구축이 중국 국제정치 학계의 주류로서 등장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에는 중국의 국제정치관, 즉 국익과 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다. 이데올로기 중심이었던 중국의 국제정치 개념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국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국익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은 근대 중국의 역사에서 외부세력에 의해 좌우되었던 주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일으켰다. 중국은 19세기부터 서구 강대국과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반식민지화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탈냉전 시기에 나타난 일련의 현상들, 즉 경제적 세계화, 국가들의 상호의존, 냉전 붕괴에 따른 안보 문

제 등의 국익에 맞는 주권 인식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徐壽 2012, 54-55). 영국학과의 부조(父祖)로 간주되는 와이트(Martin Wight)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이 현상(現狀), 과학, 방법론, 정책에 관심을 보여주는 반면 영국학과란 역사, 규범, 철학, 원리를 중요시했다(Butterfield & Wight 1966, 12). 영국학과는 미국 국제정치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반박에서 독자적 학문을 추구했으나, 중국에서는 현실 국제정치의 구조에서 출발했다.

특히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이는 1954년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인도의 네루(Jawaharlal Nehru)의 회담에서 합의된 영토와 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을 말한다. 중국에서의 자주독립은 주권에 있고, 평화공존 5원칙은 그 핵심이 된다(장칭민 2013, 38-40). 2014년 5월 28일 중국 외교부와 중국국제법학회(中國國際法學會)는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에 참여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리우전민(劉振民)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평화공존 5원칙을 실행하며, 국가 주권의 확고한 수호자이며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력한 수호자로서, 경제사회협력 및 발전의 전면적 추진자, 국제질서와 국제법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국가이다(밑줄: 필자 강조).”(『人民日報』 2014/05/28)

리우전민의 발언은 이미 독자적이었던 중국의 주권 인식을 더욱 발전시키며, 현재 기존질서와의 존속보다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질서와 법치를 만들어 간다는 것, 즉 기존질서에 대한 반박이 아니더라도 수정 의지를 표명했다. 학회와 정부의 결합으로 학회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학회가 정부에 국가정책의 이론을 제공한다. 중국학과의 대두와 더불어 2003년 당시 중국외교부 부부장(部部長)이었던 왕이(王毅)는 선진국은 자국의 국익에 봉사하는 국제관계이론 구축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중국의 국제정치학 역시 외교에도 필요하고,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학자들의 책무라고 했다(徐壽 2012, 57-59). 왕이는 2013년부터 제11대 중국 외교부장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고대 역사에서 현대 외교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는 천하론이나 조공체제가 가지는 국경 초월성으로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 인식을 증폭시키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학계는 독자적으로 국제정치학을 존립하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사상, 문화, 경험 등을 재생하고, 이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이중성 외 2014, 101). 이는 학문과 중국 정부의 연대와 공유를 의미하고 있고, 학문과 중국 정부의 정책적 괴리가 크지 않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국가 직속 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주도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¹¹⁾ 따라서 중국은 국가 수준에서 동북공정을 통해 자국의 정체성을 내세우려고 한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의도에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따른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의 대응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외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 학계에 대한 파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키신저(Henry Kissinger)의 박사학위논문은 유럽의 정통성(legitimacy)과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으로 지탱되었던 19세기 빈 회의(Congress of Vienna)에 관한 연구물이었다.¹²⁾ 그는 1971년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접근의 토대를 마련했고, 현실정치를 경험했다. 키신저에 따르면,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서구 시스템과 다른 것이며, 미국과 같은 보편적 개념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주변 민족과 적대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으나, “인근의 민족들은 중국 정부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한, 중국과의 접촉으로부터 혜택을 본다는 것이 중국의 믿음이었다”는 것이다. ‘천하’는 중국이라는 제국에 있어 한족과 수많은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공동체를 의미했다(키신저 2012, 36-39). 키신저는 2014년에 출간한 *World Order*(『세계질서』)에서 아시아의 질서가 베스트팔렌적인 발상과 괴리가 있고, 특히 고대 문명, 제국, 공산주의 혁명을 거쳐 현재 강대국이 되었던 중국의 노선은 인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1970년대부터 공산 중국은 국제 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베스트팔렌체제에 대해서는 갈등적이었다는 것이다.

11)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정치권이 학계를 후원하거나 반대로 학계가 정치권에 이론을 제공하는 상호보완적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계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학문세계와 국가의 일관된 행동을 설명하는 책임이 수반되는 정치세계와의 관계성을 재확인시키기도 한다.

12) 후일,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A World Restored: Metternich, Castlereagh and the Problems of Peace, 1812-1822*가 출판되었다.

“중국이 베스트팔렌 체제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었다. 중국을 국제적인 국가 체계에 편입시킨 역사에서 비롯된 모순이었다. 중국은 처음에 자국의 역사적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의 국제 질서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 고위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중국인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중국이 그 체계의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던 규칙들을 지키라고 요구받았다.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 질서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지배적인 일부 규칙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 질서가 발전하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조만간 이러한 기대에 근거하여 행동할 것이다 (밑줄: 필자 강조).”(키신저 2016, 256)

중국은 서구적 베스트팔렌 주권 모델에 회의적이며, 현실과 괴리된 행동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박홍서 2010).¹³⁾ 국제정치학에서 주권 개념은 국제관계를 고찰하는 주요 핵심어이다. 중국의 역사에서 주권이란 서구적인 것이 아니라 종주권(suzerainty)의 개념으로 작동했다(Jackson 2007, 7).

중국이 세계질서를 구상한다면, 타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이정남 2017). 다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중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국학파는 전통적 사상과 역사를 기초로 하면서, 21세기라는 현실정치의 상황에 맞추고, 더 나아가 중국의 행동을 세계질서에서 중국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추구한다. 중국 국제정치학에서의 중국 중심적 관념은 동북공정을 주도한 중국 역사학계와 공통점이 있다.¹⁴⁾ 그리고 고대 역사에 대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통일 한반도 문제에도 연결되어 있다. 즉, 북한의 붕괴에 따라

13) 국제경제 및 국제안보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고찰한 유희복(2017)에 따르면, 중국은 이전보다 기존의 국제규범이나 제도에 불만과 수정요구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14) 동북공정 관련 중국 연구자들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분석과 비판에 관해서는, 조인성 외(2010)의 논의 참조. 이 책이 출판된 당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은 발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책의 발간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사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 중국학계의 중화주의적 역사서술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조인성 외 2010, 5).

중국은 영역 재편성에 있어 자신들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새롭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문형진 2008, 21). 그러한 우려는 결국 고대 역사가 현재를 관통하여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성이 변경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동북공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사적 성찰을 기반으로 한 언급은 나라의 명칭과 실체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주권국가체제에 대한 언급으로서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중화민국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국가 혹은 국명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기에 따라서 역사상의 ‘중국’이 갖는 의미가 달랐음에도 ‘중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사를 이해하고 서술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사를 서술 혹은 설명함에 있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중국’을 사용하고, 역사상의 ‘중국’은 역사상의 정식 국명이 아니므로 당시의 실제 국명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사의 범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중국’의 개념과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인철 2010, 349)

현재의 중국이라는 실체는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땅과 민족에 의한 것이다. ‘中國’이라는 용어는 고대에 있어 ‘중앙평원의 나라들’이라는 뜻이며 현재의 중국대륙 중앙부에 있었던 도시나 지역을 의미했다(Eberhard 1982, 9). 중국이라는 명칭과 과거 중국의 명칭의 불일치란 결국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킨다.

IV. 동북공정에서 일본으로

일본은 동북공정에 대해 제3자이며, 정부 수준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일본 국회에서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용어가 나온 바가 있으나, 이는 동북아에 있는 역사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거론되었을 때, 나왔을 뿐이었다.¹⁵⁾ 일본 언론 역시 동북공정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2002년

15) 國會會議錄檢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 (2018년 9월 25일 검색)

부터 2018년까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서 ‘고구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많은 기사들을 찾을 수 있으나, 이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한편 ‘동북공정’에 관해서는 2007년 4월 3일 『아사히신문』의 기사에서 “중국의 정부계 연구기관이 주도한 중국 동북사연구”는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연구센터” 등이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중국 관계자와 접촉하여 인터뷰를 행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연구총괄의 보고서 등은 나오지 않지만, 동북공정의 성과를 선전하지 않아도 이번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중국 측에서는 장래 조선반도 통일을 전망하고 조선족이 민족의식을 고양시켜 독립이나 통일조선에 귀속하는 움직임을 견제하려 하는 생각이 있다”고 보도했다(『朝日新聞』 2007/04/03). 일본 언론에서 동북공정은 한정적이었으나, 중국의 의도와 한반도의 장래 양상을 연계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사에서의 만주사(滿洲史)와 “조선사(朝鮮史)” 그리고 중일관계사를 회귀시킨다. ‘고구려 문제를 둘러싼 중국·한국의 역사인식’이라는 특집을 통해 발표된 이노우에 나오키(井上直樹)의 연구는 고구려 귀속문제에 대한 중국의 연구 상황의 정리와 아울러 한국, 북한의 대응과 연구 동향을 서술했다. 중국에서 고구려의 귀속 문제를 언급한 인물은 “동북사(東北史) 연구의 개척자”로 알려진 진위푸(金毓黻)이다. 그는 1940년대에 『동북통사(東北通史)』를 출간했다. 진위푸는 고구려 일족이 원래 부여에서 분파되었으나, 중화민족의 하나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는 만주사변(1931년), 만주국 성립(1932년)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쟁탈전이 있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당시 일본에서는 만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만주가 중국사와 별도의 만주사를 가진 것으로 주장되었다. 근대 중일관계에서 만주 지역은 당대의 정치적 과제와 연계된 것이었다(井上 2005a, 133-134). 그리고 1980년대까지 중국은 고구려사를 조선사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중국의 연구소 및 학계 주도의 고구려사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대응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노우에의 고구려사에 대한 이해는 중국이 현재의 국경선

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시키고, “고대 역사상의 국경”을 통해 역사를 인식하는 것에 비해, 한국이나 북한은 국경을 중시하면서도 그 “역사의 계승성”을 중시함으로써 대립이 생겼다고 보았다. 그는 고구려사 연구의 과제란 “근대 국민국가적 역사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井上 2005b, 89).

1930년대 일본이 동북지역에 성립시켰던 대만주제국(大滿洲帝國, 1932-1945년)은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내세웠다. 오족이란 1931년 만주사변 이전부터 만주에 거주하던 한족, 만주족, 몽고족, 일본인, 조선인의 총칭이었다. 만주사변의 결과, 국제연맹에서 이탈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만주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만주 문제에 관해 논쟁이 없지는 않다. 다만, 그것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만주국 건국을 주도한 것과 별도로 다민족의 공동체로서의 성격 문제이다. 만주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논쟁은 1930년대에 이미 존재했다. 중요한 점은 만주 문제가 결국 고구려 귀속 문제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1910년 한국병합조약 이후 일본에 의한 만주 진출은 중일 간의 고구려 귀속 문제로서 일본의 동양사학, 조선사학(朝鮮史學)과 연루된다는 것이다(井上 2013, 197-198; 240-241).¹⁶⁾ 따라서 중국은 1930년대 만주에 세력권을 확대했던 일본과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동북공정을 통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주장이 제시된다.¹⁷⁾

발해사 연구자 후루하타 도루(古畑徹)는 동북공정이란 기본적으로 중국의 “안쪽으로 향하는 문제”이며,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 오해와 불신이 존재하여 사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중국사의 전문가에 의한 고구려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그는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서술을 극복

16) 2009년 가쿠슈인(學習院)대학 동양문화연구소는 『대두 중국의 대외관계』라는 책을 출간했다. 중국의 대두에 따른 주변국 일본, 중앙아시아, 몽골, 베트남, 한반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성을 고찰한 것이며, 중국과 한반도 관계에 대해서는 동북공정을 예로 들었다. 이 문제를 다룬 쓰지 히로노리(辻弘範)는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민족주의가 특정 인사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1909년 청국과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이 현재 한국 학계에서 무효라는 주장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이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연구자들도 동북공정을 둘러싼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辻 2009, 121-145).

17) 조인성 외(2009, 6)에서 신연성의 간행사.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대국민국가는 국민으로서 내포되는 사람들의 단결·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의 공유라는 방법을 취하고 역사를 근거로 동일민족과의 주장을 실시해 타민족을 흡수하거나 대립의 역사를 강조하며 인접하는 민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부채질하여 내부단결을 유지한다는 것을 자주 행해 왔다.”(古畑 2008, 196-197).

후루하타는 과거에 근대 국민국가의 역사를 투영시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탈근대역사학”적 서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인물이다. 그의 주장은 결국 근대주권국가체제 시대에서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한 것이었다. 한국·조선사의 계보를 추적한 야기 다케시(矢木毅) 역시 비슷한 논리를 제시했다.

“중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 각각 주장하는 말이 다를 것이고, 결국은 개개인의 ‘세계관’의 문제이다. 그러나 역사학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고구려는 고구려이며, 그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따라서 후세의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이른바 ‘고구려 논쟁’은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영역에 근대국가의 영역관을 강요하는 지극히 무모한 논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밑줄: 필자 강조).”(야기 2015, 258)

야기가 고구려사 논쟁을 “근대국가 성립 이전 영역”이라고 말했듯이 고구려가 있었던 시대는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시대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¹⁸⁾

중국의 정치학과 역사학에 능통하는 일본 학자 가와시마 신(川島眞)은 비록 동북공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역사연구의 관점과 현대적 해석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역사연구의 외형(外形)을 취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요청되는 ‘해석’을 과거에 투영하여 역사로서 서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연구

18) 한국어로 번역된 야기의 책제목은 『한국사의 계보』이지만, 일본어 원서의 제목은 『한국·조선사의 계보(韓國·朝鮮史の系譜)』이다.

도 있다. (...) 이미 역사에서 시사점을 얻으려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현대적 요청을 의식하면서 역사해석의 수정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부분적으로는 이르고 있는 것도 있다.”(川島 2014, 109-111).

중국의 국제정치학은 중국의 전통적 역사관이나 사상 등, “중국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양한 관점들을 포함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해석이 위협으로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조선족 중국인 김광림(金光林)의 글은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일본어로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의 연구는 한국, 북한 및 중국과의 고구려 귀속문제, 즉 동북공정 흐름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었지만, 동북공정이 다른 주권국가의 영역에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중화중심의 천하관이 뿌리깊이 존재하고 현재 중국에서도 중국 역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을 견지함으로써 고구려사에 대해 간단히 조선사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중국 본위로 역사를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중국 역사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그것이 주변의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몽골, 베트남, 터키, 극단적인 경우는 일본도 말려들게 하는 역사논쟁 또는 분쟁을 일으키고, 주변 각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감과 경계감을 증식시키는 결과가 된다 (밑줄: 필자 강조).”(金光林 2004, 147)

김광림은 동북공정을 통해 나타난 중국의 역사 인식이 일본에도 끼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1980년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근린 각국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것에 비해, 동북공정은 한정적일 수도 있으나, 향후 동북공정이 외교적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또한 중국 학계가 중국의 문화개방과 경제성장으로 자유로운 연구와 발언이 가능해지고, “중화적 자신감”의 증폭이 중화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중국에 의해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편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일 필요성을 지적했다(金光林 2004, 146-148).

중국의 군사력 증가와 남중국해, 중일 간의 최대 현안인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釣魚島及其附屬島嶼)¹⁹⁾ 문제들을 동북공정과 연계시켜 중국의 패권 문제로서 보는 인식이 있다(澤 2004a, 85-87). 즉, 고구려 귀속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중국의 영토적 패권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패권적 동태를 전제로 하여 동북공정을 본 것이다. 사와 기시로(澤喜司郎)는 “중국의 영토적 패권주의와 고구려사 왜곡”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은 북한의 체제 붕괴 후에 북한을 자국 영토로서 실효 지배하기 위한 준비이며, 그 상정된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등을 공격하면, 중국은 북한에 군을 침공시키고, 미군보다 앞서 북한 전토를 군사 관리하에 두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澤 2004b, 57). 그는 동북공정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일환이며 북한의 급격한 붕괴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계시켰다. 한국 연구자가 주장했듯이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국가로서 한반도를 교두보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정학적 논리와 상통한다(전병근 2004, 14-15).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센카쿠열도 문제는 인식적, 역사적, 국제법적 쟁점을 수반한 문제로서 나타났다. 이것은 주권 영역을 둘러싼 중일관계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현대중국정치학의 전공자인 고쿠분 료세이(國分良成)는 중일관계에서 가장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일본은 센카쿠를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영토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우선 영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시키려고 있다. 일본의 근거는 1895년 각료회의에서 센카쿠를 일본의 영토로 각의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인데, 중국은 명나라 시대의 문서에 이미 섬에 대한 기술이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왕조가 지배 또는 관할한 모든 영역이 지금 중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19) 일본과 중국은 각각 국가 차원에서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에 대해 역사적, 국제법적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外務省, “尖閣諸島”, <http://www.mofa.go.jp/mofaj/area/senkaku/>. (2018년 9월 25일 검색); 中華人民共和國駐日本大使館,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聲明(2012/09/10)”, <http://www.china-embassy.or.jp/jpn/zrgxs/zywj/t968209.htm>. (2018년 9월 25일 검색) 중국의 성명 날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 것에 기인했다.

다. 이는 한국과 논쟁이 됐던 고구려 문제(동북공정)와 똑같은 논리다 (밑줄: 필자 강조).”(문정인·서승원 2013, 233-234)

동북공정과 센카쿠열도 문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만, 중국은 과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영토적 문제를 주장한다는 논리가 제기되었다. 센카쿠열도 문제는 중국의 경제적 대두와 군사력 증대를 배경으로 중국이 스스로 대국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증명했고, 그 의식은 역행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에 대한 집착이 있는 중국은 대국화를 목표로 하고, 중국의 독자적 전통성을 강조한다는 논리가 중국을 전공으로 하는 일본인 연구자들 사이에 있다(아마코 2013, 199-201).

물론 한중관계의 고대사와 중일관계의 근현대사의 차이로서 주권국가체제 시대의 유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사에 관한 동북공정이 현대적 문제로 승화되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권국가체제 속의 근대 중일관계에는 과거 대륙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현재 센카쿠열도 문제에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²⁰⁾ 주권의 명확한 확립성이 없었던 고대사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권 의식이 각각 근현대사적 문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틀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주권 문제로 귀착하는 센카쿠열도 문제는 중일관계의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자관계에는 미국의 존재가 이미 연루되어 있다.²¹⁾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있듯이 미일 양국은 일본의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각자의 헌법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센카쿠열도 문제에 적용된다. 중일관계에는 동북공정과 다른 물리적 차원이 존재한다. 영토 문제를 둘러싼 주권국가체제 하에서의 현대 중일관계는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²²⁾ 그런데, 동북공정을 현대 주권국가체제 속에 투영시키려는

20) 중일 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지적으로 분쟁이 발발하는 가능성을 지적했고, 충돌을 회피하는 노력과 제도 등 다양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김기주·황병선(2013)의 논의 참조.

21) 엘드리지(Robert D. Eldridge)에 의하면 미국은 센카쿠열도 문제에 관해 “중립적이지만 연루되어 있다(neutral-but-entrapped)”고 표현했다(Eldridge 2014, 5-13).

22) 한일 간,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을 분석하여 한중일 삼국이 분쟁의 파멸적 귀결을

중국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이 한국의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교 전략상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일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구도는 바로 한-미-일 3국 동맹 체제의 강화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거꾸로 이러한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소준섭 2012, 330)

역사를 물리적 힘의 범주로 승화하거나 중일 간 해양 문제와 같은 범주에서 동북공정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주장은 결국 역사투영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V. 결론

동북공정이 곧바로 중국의 패권을 의미하거나 중국이라는 국가통일성, 민족단결성 그리고 변경안정성 등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지를 공고화시키는 전략으로 간주하는 시각들에 대해 신중한 분석과 대응을 환기시키는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이희욱 2007, 20-21).²³⁾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과 과대해석은 관념적,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시에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거나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졌을 때, 중국이 과거의 역사성을 강조하여, 현재 북한과의 국경변경을 요구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만약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진다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은 국제법에 따라 “통일한국에 대해 자동승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근관 2010).²⁴⁾

그러나 한편으로 냉전기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의 왕조가 조선을 관리

피하고자 하는 평화적 관리 방식을 조명한 것으로, 최희식(2013)의 연구를 참조.

23) 이희욱은 동북공정을 통해 일어난 현실 정치의 논란들을 검증했다. 그는 중국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면서도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와 중국 지방 연구자들의 주장을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24) 이근관의 연구는 동북공정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지만, 만약 통일 한반도가 탄생할 경우, 중국과의 국경 문제가 거론될 공산이 있다고 했다.

한다는 천조(天朝)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金日成)의 관계는 양호했으나, 1976년 마오쩌둥의 사거,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는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에 변화를 일으켰다(선즈화 2017).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자국 내에 있는 조선족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에게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다. 조선족의 불안정성은 몽골, 티베트, 위구르 등에 영향을 끼쳐, 중국의 변경 정세 구도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²⁵⁾ 동북공정을 시작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의 의도와 별도로 결과적으로 동북공정의 전파력과 주장들은 계속될 것이다. 명확한 사실은 20세기 후반부터 제창되어 왔던 중국의 대두가 오늘날에는 이미 현실화되었다는 점이다. 거대한 중국의 외교 동태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있으나, 중국 스스로가 학문을 기반으로 한 발전적 주권 이론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만들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공정은 결국 현재 주권국가체제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주권 개념 발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중국적 주권의 이론화는 중국의 역사 재정립과 연계된다. 고대사를 기반으로 한 동북공정과 현재 주권국가체제 시대의 센카쿠열도 문제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투영하고 있다는 논리가 일본 연구자로부터 제기되었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에는 당사자성이라는 점에서 괴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두와 그 행동에 대해 경계심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의 인식은 궤를 같이한다.

둘째, 일본 학계에서는 동북공정을 통해 20세기 초 만주에 대해 일본이 관여했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일본이 동북지역의 역사에 대해 학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만주에는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20세기 초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통해 한반도를 세력권에 넣었고, 이어서 만주에서도 세력권을 확대하는 것이 당대 목표였다. 1945년 이전에 일본에 존재했던 만주사와 조선사를 일체화시킨 문명사적 만선사(滿鮮史)는 오늘날 쇠퇴했으나, 만주-한반도 지역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일본에서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25) 양하이잉(楊海英)의 인터뷰 기사. “緊迫の朝鮮半島 中國は何を考えているのか”, <https://news.yahoo.co.jp/feature/597>. (2018년 9월 25일 검색)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고구려연구회 엮음 (2008).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여유당.
- 김기주·황병선 (2013). “샌카쿠(다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전쟁의 단계 이론 적용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2호, pp. 39-68.
- 김명섭 (2017). “네르친스크조약의 국제정치학: 1689년 러·청 국제조약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7집. 4호, pp. 7-44.
- 김준석 (2012). “17세기 중반 유럽 국제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pp. 111-139.
- 김태완 (2008). “국제정치 시각으로 본 중국의 동북공정: 국내-국제 연계분석.” 『국제관계연구』. 제13권. 제2호, pp. 5-38.
- 김현숙 (2016).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제53호, pp. 31-61.
- 나가타 아키후미 (2017). 『세계사 속 근대한일관계』. 김혜정 역. 일조각.
- 류즈원 (2017). “국제법상의 ‘중국의 길.’” 면홍화·리광·샤오시 주편. 『다시, 중국의 길을 묻다: 시진핑 시대의 국가전략』. 성균중국연구소 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p. 234-254.
- 마이클 J. 그린 (2018). 『신의 은총을 넘어서: 1783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대전략』. 장휘·권나혜 역. 아산정책연구원.
- 면홍화 (2017). “한국어판 서문.” 면홍화·리광·샤오시 주편. 『다시, 중국의 길을 묻다: 시진핑 시대의 국가전략』. 성균중국연구소 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p. 15-18.
- 문정인 (2010). 『중국의 내일을 묻다: 중국 최고 지성들과의 격정토론』. 삼성경제연구소.
- 문정인·서승원 (2013).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일본 최고 전략가들이 말하는 일본의 本心』. 삼성경제연구소.
- 문형진 (2008). “중국의 조선족 통합정책과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왜곡.” 『다민족 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역사재단, pp. 14-51.
- 박홍서 (2010). “내재화된 위선?: ‘중국적 세계질서’의 현실주의적 재해석.” 『국제정치논총』. 제50집. 4호, pp. 7-21.

- 백영서 (2005).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pp. 10-34.
- _____ (2013).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인의 중국인식의 변화: 대중과 역사학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제58집, pp. 55-85.
- 선즈화 (2017). 『최후의 천조: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역. 선인.
- 소준섭 (2012). 『제국의 부활: 슈퍼파워 중국과 21세기 패권』. 한울.
- 아마코 사토시 (2013). 『중국과 일본의 대립』. 이용빈 옮김. 한울.
- 야기 다케시 (2015). 『한국사의 계보: 한국인의 영토의식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박결순 역. 소와당.
- 엔웨통 (2014).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 고상희 역. 글항아리.
- 왕이저우 (2013). 『중국 외교의 창조적 개입: 중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원식 역. 차이나하우스.
- 유희복 (2017). “신흥 강대국 중국의 국제질서 인식과 실천.” 『아태연구』. 제24권. 제3호, pp. 137-174.
- 윤휘탁 (2008a).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pp. 275-300.
- 윤휘탁 (2008b). “‘포스트(Post) 동북공정’: 중국 東北邊疆戰略의 새로운 패러다임.” 『歷史學報』. 第197輯, pp. 99-129.
- 이근관 (2010). “통일 후 한-중 국경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논총』. 제55권. 제4호, pp. 117-144.
- 이인철 (2010).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백산자료원.
- 이정남 (2017). “중국이 구상하는 세계질서 상(像): 중국내 국제정치학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7집. 4호, pp. 121-161.
- 이종성·장영덕·최영미 (2014). “한중일 삼국의 독자적 국제관계 이론화 성과에 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54집. 4호, pp. 75-124.
- 이희옥 (2007). “동북공정의 정치적 논란에 비판적 해석.” 『동아연구』. 제53권, pp. 9-45.
- 자오팅양 (2010).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노승현 역. 길.
- 장칭민 (2013). 『중국의 외교』. 김애경 역. 敎友社.
- 전병근 (2004).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통일정세분석』. 통일연구원, pp. 1-17.
- 전재성 (2009).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중첩, 복합의 거시이행.”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 pp. 7-31.

- 조인성 외 (2009).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0).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사 연구논저 분석』. 동북아역사재단.
- 최희식 (2013).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3권. 제2호, pp. 33-63.
- 헨리 키신저 (2012).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권기대 역. 민음사.
- _____ (2016). 『세계질서』. 이현주 역. 민음사.
- 홍정표·장즈롱 (2011). 『현대중국외교론』. 나남.
- Butterfield, Herbert and Martin Wight (1996). *Diplomatic Investigations: Essays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Eberhard, Wolfram (1982). *China's Minorities: Yesterday and Today*. Belmont, Calif.: Wadsworth.
- Eldridge, Robert D. (2014). *The Origins of U.S. Policy in the East China Sea Islands Dispute: Okinawa's Reversion and the Senkaku Islands*. New York: Routledge.
- Hamashita, Takeshi (1997). “The Intra-Regional System in East Asia in Modern Times.”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13-135.
- Holsti K. J. (2004). *Taming the Sovereigns: Institutional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son, Robert (2007). *Sovereignty: Evolution of an Idea*. Cambridge; Malden, MA: Polity.
- Lesaffer, Randall (2004). “Peace Treaties from to Westphalia.” Randall Lesa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9-44.
- Philpott, Daniel (1999). “Westphalia, Authority, and International Society.” Robert Jackson (ed.). *Sovereignty at the Millennium*. Oxford: Blackwell, pp. 144-167.
- _____ (2000). “The Religious Roots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52. No. 2, pp. 206-245.
- Teschke, Benno (2003). *The Myth of 1648: Class, Geopolitics, and the Making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New York: Verso.

- 古畑徹 (2008). “中韓高句麗歴史論争のゆくえ.” 『東アジア共生の歴史的基礎: 日本・中國・南北코리아の對話』. 東京: 御茶の水書房, pp. 181-208.
- 久保田徳仁 (2012). “ウェストファリア國際体系の實像: 1648年はどのような意義をもつ年なのか.” 山影進(編). 『主權國家体系の生成: 「國際社會」認識の再検証』.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pp. 122-178.
- 金光林 (2004). “高句麗史の歸屬をめぐる韓國・朝鮮と中國の論争.” 『新潟産業大學人文學部紀要』. 16号, pp. 137-149.
- 明石欽司 (2009). 『ウェストファリア條約: その實像と神話』.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徐濤 (2012). “「中國學派」の登場?: 現代中國における國際關係理論の「歐米化」と「中國化」.” 『アジア研究』 58卷. 1-2号, pp. 51-68.
- 辻弘範 (2009). “台頭中國と朝鮮半島: 「東北工程」をめぐる.” 中居良文(編). 『台頭中國の對外關係』. 東京: 御茶の水書房, pp. 121-145.
- 井上直樹 (2005a). “高句麗史研究と「國史」: その歸屬をめぐる(上).”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2号, pp. 132-152.
- _____ (2005b). “高句麗史研究と「國史」: その歸屬をめぐる(下).”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3号, pp. 178-193.
- _____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 大陸政策と朝鮮・滿州認識』. 東京: 塙書房.
- 川島眞 (2014). “中國における國際政治研究の展開: 「中國モデル」という課題.” 『國際政治』. 第175号, pp. 100-114.
- 澤喜司郎 (2004a). “東アジアにおける中國の霸權的領土主義.” 『東亞經濟研究』. 62卷. 1号, pp. 67-89.
- _____ (2004b). “中國の領土的霸權主義と高句麗史歪曲.” 『山口經濟學雜誌』. 53卷. 4号, pp. 375-397.

2. 기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토론 결과보고서.
- “동북공정의 성과... 중국연호로 정리한 韓고대역사서 中서 출간.” 『연합뉴스』. 2017년 1월 19일.
- “高句麗の研究 中國本音隠し.” 『朝日新聞』. 2007년 4월 3일.
- “紀念“和平共處五項原則”發表60周年研討會舉行.” 『人民日報』. 2014년 5월 28일.
- 國會會議錄檢索システム. <http://kokkai.ndl.go.jp/>. (2018년 9월 25일 검색)

外務省. “尖閣諸島.” <http://www.mofa.go.jp/mofaj/area/senkaku/>. (2018년 9월 25일 검색)
中華人民共和國駐日本大使館.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聲明(2012/09/10). <http://www.china-embassy.or.jp/jpn/zrgxs/zywj/t968209.htm>. (2018년 9월 25일 검색)
“緊迫の朝鮮半島 中國は何を考えているのか.” <https://news.yahoo.co.jp/feature/597>.
(2018년 9월 25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29일 |

|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21일 |

| 게재 확정일 : 2018년 12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5 No. 4 (2018)

The Age of Sovereign State System, China's Northeast Project, and Japan

Soongbae Kim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following areas regarding the Northeast Project. First, it studies China's recognition of sovereignty regarding the expansion of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Northeast Project. The Northeast Project was led by Chinese historians, but this study looks at the Northeast Project and the Chinese world of literary that had emerged in the same era by focusing on the logics of key figures from China's international political alliance. Second, it highlights the connection with Japan. Japan is a third party regarding the Northeast Project, and they do not intervene with the history of other sovereign states as long as it is not a domestic probl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is logical structure in that articles related to the Northeast Asia Project were published in the Japanese academic community. To this end, this study captures the time and space of the Northeast Project as Northeast Asia's time and space by connecting the individual issues step by step, with the expansion of the focus area to China's recognition of sovereignty regarding the Northeast Project in the modern sovereign state system and its relations with Japan.

- Key words: Westphalia, Sovereign State System, Northeast Project, Historical Projection, Sino-Japan Relations